

일본과 아시아②

일본은 우경화?: 변화하는 일본의 복잡한 보수(保守)

손열 (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황을 달리는 가운데 그 원인을 일본의 우경화 혹은 보수화에서 찾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1955년체제”라는 보수정당(자민당)과 혁신정당(사회당)의 비대칭적 정당체제가 냉전 종식과 함께 후자가 쇠퇴하면서 보수정당만이 남은, 그들간의 경쟁으로 구성되는 정치질서를 이루고 있고 이것이 주변국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수의 콘텐츠는 무엇이고 누가 핵심적 행위자/집단이며 이들은 일본사회에서 얼마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가져오는 대외관계적 함의, 특히 한일관계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북구나 영국 등 극소수의 사례를 예외로 한다면 현재 “보수”를 이름으로 한 정당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념적 좌와 우를 넘어 많은 정치세력들이 보수란 라벨을 갖게 되거나 원해왔으며 그 결과 보수는 그 대극에 위치한 자유(liberal)나 급진(radical)보다 훨씬 널리 쓰이는 언어가 되었다. 왜 그런가?

보수란 본래 지키고 유지한다는(protect, preserve, save) 의미이므로, 이런 점에서 보수주의는 체제의 안정(stability)이란 견지에서 변화를 인정하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사고라 하겠다. 버크(E. Burke) 이래 보수주의는 의무, 권위, 전통, 종교, 사회/국가적 정체성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즉, 제도와 전통에 대한 개인의 구속 혹은 내장성(embeddedness)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 자유주의(liberalism)는 전통질서로부터 개인의 해방을 주장한다. 개인의 욕망이 근대사회의 기초이며 어떠한 가치와 규범도 이를 넘을 수 없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담지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분명한 이념적 콘텐츠를 갖고 있는 반면 보수주의는 지속되는 제도와 전통을 중시하나, 그 제도와 전통은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바로 앞의 과거에 어떤 제도와 전통이 만들어져 있는가에 따라 보수주의의 콘텐츠는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수와 보수주의는 상대적 개념이다. 상황적 맥락 여하에 따라 다양한 관념과 이념이 보수의 울타리로 들어 올 수도, 나갈 수도 있다. 자유주의의 작동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와 제도가 보수로 전화된 대표적 사례는 신자유주의(시장과 작은 정부)이다. 미국의 보수(공화당)에는 신자유주의가 주요한 사상적 근거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경제적 자유주의는 19세기 보수주의를 깨는 이념이었다. 오늘날 보수주의는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대항이념으로 탄탄히, 폭넓게 자리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보수주의 자체가 확고한 이념적 콘텐츠를 갖지 못하는 속성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맥락에서 일본의 보수화를 조망할 때, 일차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일본의 보수는 무엇인가이다. 일본의 보수세력은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전통은 무엇인가?

2. 역사로서 일본의 보수

보수가 상대적 개념이라면 한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을 수록 보수 -- 그리고 그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으로서 혁신 -- 의 내용도 따라서 변화한다. 일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 근대사를 둘러보면, 幕末·維新기 보수는 攘夷, 혁신은 開化이고, 메이지 중반이면 보수는 國權, 혁신은 民權, 러일전쟁기가 되면 보수는 主戰과, 혁신은 非戰과, 다이쇼부터 쇼와前期에는 국가주의가 보수, 마르크스주의가 혁신이라 규정할 수 있다. 여기서 보수를 관류하는 공통의 특질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이 어려움은 전후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이다.

패전 직후 일본정치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한 세력은 미군정(SCAP)이었다. 미군정은 기존질서 즉, 戰前일본을 지탱한 보수적 가치와 제도(천황제, 군국주의, 파시즘)를 폐기하는 주역이었다. 이들은 대다수 일본인과 함께 “비군사화(demilitarization)”과 “민주화(democratization),” 혹은 “평화”와 “민주주의”란 이상주의적 슬로건을 내걸었다. 군국주의국가의 해체는 일본의 민주화에 의해 가능하고, 따라서 민주적 국가를 건설하는 것만이 장래 일본이 두 번 다시 군국주의화의 위협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혁신계열과 비맑스주의 지식인들은 “전후”의 의미를 크게 강조하였다. 전후는 전전의 관습과 제도로부터 철저한

단절이며, 그 시기는 가까운 과거 즉, 1931-45년 파시즘과 전쟁기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메이지기 역시 제국일본으로서 부정의 대상이었다. 파시즘과 전쟁은 진보의 역사로부터 일탈이 아니라 일본의 근대가 구조적으로 왜곡된 까닭에 등장한 것이며 일본근대의 “진실한 역사(true history)”는 전후에 시작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의 전후 혁신/진보세력(사민주의, 복지국가) 역시 사회주의계열이었지만 일본의 경우 특징적인 사항은 이들이 유럽의 그들과는 달리 사회정의의 이름으로 국영화와 국가개입의 확대(big government)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들은 평화와 민주주의란 기치하에 오히려 미국적 보수주의 전통(libertarianism) 즉, 국가영역의 축소, 교육에 있어서 자유의 확대, 재군비 및 대외개입(미일동맹) 반대 등의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1) 보수본류(保守本流)

이러한 입장을 일정하게 지지한 세력이 바로 초기 미군정이었다면(1945-1947), 냉전의 도래와 함께 초기의 이상주의는 억제되고 대신 경제재건, 재무장(재군비), 공산주의 봉쇄로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진다(reverse course). 패전에서 생존한 보수정치가들은 역코스를 기회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였는데 그 산물이 이른바 “보수본류”노선이다. 요시다 시게루를 필두로 한 이들은 (1) 전전의 전통적 가치를 대신하여 경제성장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적 가치로 설정하고, (2)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안보를 위임한 후, (3) 실용주의 원칙에 근거한 발전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부상에 따른 현실적 권력구조를 표상하는 두 체제가 하나는 “샌프란시스코체제” 즉, 미일안보조약과 분리된 평화(separate peace),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한 “1955체제” 즉, 보수정당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국내정치체제이다.

보수본류는 비록 전전의 전통과 제도를 부인한 위에서 출발하였지만 이들의 역사관은 기본적으로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의 역사관이다. 일본의 근대는 전근대(특히 도쿠가와시대)부터의 지속적 진화가 메이지유신에 의해 꽃피우게 되었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승리를 통해 “열강”의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1931-45년(군국주의, 파시즘)의 일시적 탈선(aberration)을 경험한 후, 1945년 다시 패도에 진입하여 근대적 성공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요시다는 전후민주주의를 메이지의 열정적인 근대화과정(자유민권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상적, 실천적 모색의 장)과 연결하여 인식하려 하였다. 전후초기 요시다, 히가시쿠니 등 지도부는 새로운 헌법질서를 메이지로의 회귀로 구상하려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수본류가 “保守”하려 한 것은 메이지국가로 상징되는 전통이었다. 여기서 전통이란 천황에 대한 경애를 바탕으로 애국

심과 공공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천황주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천황을 병존시키려는, 따라서 상징천황제를 통해 천황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시도이었고, 이들이 미군정이 내어놓은 신헌법 제1조(상징천황 명시)와 제9조(평화조항)를 어렵지 않게 교환한 것도 이때문이었다.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1989)의 말처럼 이들의 과거/전통은 메이지의 빛과 쇼와 초기의 어둠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들은 전후민주주의의 강조 보다는 전전부터 지속해온 경제성장의 역사를 강조하게 된다.

메이지전통을 활용한 사회통합, 경제성장지상주의, 미일동맹에 의한 안보확보는 보수분류의 3대 지주이었다. 여기서 성장과 안보는 동전의 양면의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재군비는 당장의 경제재건과 성장을 위해 억제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물론 경제성장이 일정하게 이루어졌을 때 군사적 역할의 강화는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이다.

(2) 보통국가('普通の國'論)

1980년대 보수분류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은 지속적 경제성장(경제기적)의 결과로 경제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랐고 이에 걸맞는 국제적 태세(posture)를 갖추려는 시도가 대두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야기된 재정적자의 확대 그리고 저성장경제로의 전환 속에서 기존의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형 체제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등장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시의 국제적 상황, 즉 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시대적 흐름 -- 정치적으로는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결합 -- 이 작용하였다. 나카소네(中曾根)는 전통, 국가, 민족주의, 적극적 대외정책을 강조하는 신보수주의, 그리고 민영화, 탈규제, 작은 국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변화의 흐름은 1990년대 들면서 냉전 종식과 함께 가속화된다. 샌프란시스코체제와 1955체제는 동반붕괴의 길을 걷게 된다. 사회당이 몰락하는 동시에 집권 자민당 역시 정치부패 스캔들을 겪으면서 내분 분열, 분당 사태를 맞고 연립정권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등장한 보수노선이 이른바 보통국가론이다. 1990년 걸프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일본이 경제대국으로서 그에 걸맞는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보수주의적 입장은 "보통국가론" 혹은 "국제공헌론"이란 이름으로 자민당의 오자와(小澤一郎), 經濟同友會와 經團連 등 재계단체, 그리고 요미우리신문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오자와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자위대의 해외파병)를 (1) UN의 기치하에서, (2) 전전 일본의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에

대한 일정한 반성 위에서, 그리고 (3) 헌법 9조의 이념 하에서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비교적 “대외지향적,” “국제주의적”인 이념으로 평가할 수 있다(渡辺 治 2001). UN의 틀 속에서, 아시아에 대한 사과와 국제평화를 견지한다는 측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990년대는 일본외교에 있어서 아시아외교에 일정한 비중을 두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1980년대 정치가의 망언, 나카소네 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 교과서왜곡 등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비판에 대해 수동적 대응을 보였던 반면 90년대 들면서는 1990년 천황의 발언, 92년 미야지마 총리, 93년 호소카와 수상, 93년 고노 관방장관, 95년 무라야마 수상 등의 일련의 담화는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3) 우익(右翼)

1990년대 전반이 보통국가론으로서의 보수가 전면에 부각된 시기였다면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반동적인 보수로서 “우익”이 정치권에 등장한다. 본래 우익이란 좌익(좌코뱅)에 반대되는 일반적인 언어이나, 일본의 경우 이는 특수한 의미를 갖는다. 우익은 “天皇尊崇의 國家主義”로서 戰前(玄洋社, 黑龍會, 大日本生産黨 등)부터 지속되어 온 정치세력으로서, 전후 특히 1980년대 등장한 “우경화”란 언어는 “우익”화의 경향을 일컫는 것이다. 1982년 교과서에서 “침략”이란 표현이 삭제되면서 시발된 교과서파동 속에서 혁신세력이 주도적으로 사용한 우경화는 역사왜곡(역사미화)의 의미를 강하게 띤다. 우익은 전전(1868-1945)의 부활 즉, 천황제 국가의 부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경화란 우익이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 혹은 정치세력이 우익적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후지오카(藤岡信勝) 주도의 “자유주의사관” 그룹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보수분류나 보통국가론의 역사의식을 “자학사관,” “점령사관” 혹은 “동경재판사관,” “코민테른사관”으로 규정하고 역사수정주의 운동을 벌여나간다. 남경대학살, 종군위안부, 식민지 지배의 공과 등 이슈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이 그것이다. 이런 운동은 1996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으로 이어져 西部邁, 西尾幹二, 石原愼太郎, 江藤淳 등 우익저널리스트, 伊藤憲一, 岡崎久彦 등 국제정치학자, 伊藤隆, 秦郁彦 등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참여, 정치적으로 영향력있는 흐름으로 등장한다.

우익에게 전후는 부정과 타과의 대상이다. “전후민주주의는 국가를 부정하고, 개인에서 출발... 미국적 언설과 사고방식 속에서 행해져왔다...전후 지식인은 거의 서양주의자”(佐伯啓思), “공산주의가 평화세력이라는 신앙” 그리고 “다이쇼의 교양주의의 연장선상”(西尾幹二)이란 한계

를 극명하게 노출하였다고 본다.1) 우익은 전후를 극복하는 즉, 전후를 넘어서 전전과 새롭게 엮는 유신(維新)을 주장한다. 물론 이들이 유신하려는 과거는 군국주의, 파시즘체제가 아니다. 천황제를 중심으로 종교적 규범과 제도를 부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시하라 신타로의 “NO라고 할 수 있는 일본(ノ一と言える日本)”과 같이 대미자주형 외교(혹은 일본형 드골주의)를 지향한다. 강한 반공주의에 근거한 중국봉쇄론, 인종주의적 경향(아시아멀시), 신자유주의 배경론도 가미된다.2)

이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90년대 중후반 일본이 마주친 미증유의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국민적 폐색감이 작용하였다. 전후 고도성장을 이룬 발전국가체제에 대한 신뢰의 상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사회적 신뢰의 동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속에서 우익은 기성체제에 대한 반동적 대안을 모색한다. 이들은 일본사회가 급속한 세계화, 미국화의 흐름 속에서 공의 쇠퇴, 도의와 윤리의 피폐가 진전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영광스런 과거를 복원함으로써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통합의 기제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시도를 보인다. 예컨대, 전전일본은 公 즉, 국가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윤리가 확립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부활시켜 현재적 곤란을 타개하려는 것이다.

3. 현재의 일본: “복수의 공간(plural space)”

본래 보수가 그러한 것처럼 일본의 보수 역시 “복잡한 공간,” “복수의 공간(plural space)”이다. 1955체제라는 보·혁구도가 혁신정당의 몰락으로 총보수화하였더라도 보수는 여전히 복수의 집단이 복수의 이념을 갖고 뛰는 복잡한 공간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념적 다원성과 복잡성을 반영하는 정치/정당체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프로그램을 담는 정당간의 경합은 존재하지 않고 자민당 내에도 다양한 그룹들이 공존, 경합하고 있다.

현재 보수는 보수분류, 보통국가론, 우익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간 힘의 우열은

1) 반면 앞서 언급한 대로 진보-혁신에게 전후는 이상(꿈)과 함께 한 “출발/새출발”이었고, 보수분류 및 보통국가론에게는 꿈 보다는 “일시적 망설임(小熊英二, 『民主と愛國』 2002)”으로 간주되었다.

2) 보다 과격한 우익세력은 1970년대 등장한 “신우익”이라 불리는 그룹으로서 “친미반공”의 기성우익을 비판하면서 “Y(알타)P(포츠담)체제”의 타도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미소 양대국에 의한 전후세계의 분열지배를 낳은 알타체제와 점령하에서 반친황, 반민족, 반국가적 전후상황으로서 포츠담체제를 타도하자는 것으로 이런 차원에서 현행헌법, 정-관-재 유착으로서 기존 보수체제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知恵蔵』 2001, 504).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보수분류는 상대적으로 소수가 되어가고 있다고 본다. 또한 우익 역시 여전히 소수파이다(예컨대, 국민의 역사교과서 채택율은 0.5% 미만). 실제 정책의 흐름을 보면 일본의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고, 미일동맹의 강화에 의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분담, 자위대의 해외파견 등에 의한 UN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보통국가론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1996년이래 10년간 일련의 조치들, 신가이드라인, 주변사태법, 국기·국가법, 헌법조사회 설치, 이라크 파병, 방위대장 개정, 미일동맹 재조정 등이 그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전전부터 잠재해 온 우익 조류의 현재화라고 보는 시각은 과장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미일동맹의 일체화의 길이지 전전형 군사대국의 길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익의 주장이 일종의 현상타파형(revisionist)라면 현재의 흐름은 중국의 빠른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 속에서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현상유지(status quo)형이라고 보여진다. 둘째, 이상의 움직임을 미국압력론 즉, 보수분류의 수동적, 반응적, 미국의존적 행태의 극적인 형태로 간주하는 견해 역시 과장된 해석이다. 국내적으로 이와 함께 추진된 헌법개정, 교육기본법 개정, 국기국가법 등에는 일정한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를 추구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견지에서 지난 5년의 고이즈미정권은 나카소네시절부터 추진해 온 보수의 진화 즉, 외교안보적으로 신보수주의와 정치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두갈래 흐름이 접합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 오자와 등의 보통국가론이 정치외교비전으로서 나카소네와는 달리 경제차원에서의 신자유주의를 또다른 정책의 축으로 내걸지 않았던 반면 고이즈미기에는 양면 즉, 한편으로 보통국가의 길이 신보수주의의 이념 하에 추진되었다면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보수주의, 특히 깅그리치(Newt Gingrich) 스타일의 포퓰리즘적 신자유주의(작은정부론)이 부각되었다.³⁾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고이즈미의 주된 관심은 신보수주의라기 보다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이다. 그는 보통국가론적 관점에서 미일동맹의 일체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UN 안보리 상임위에 진출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중국과의 역내 패권경쟁에 주저없이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정치경제체제의 개혁이 정책우선순위에서 첫번째이다. 나카소네 이후 시도되어 온 정치경제개혁의 지지부진은 결국 금융위기와 잃어버린 10년을 가져왔고, 이런 속에서 “성역없는 개혁”을 내걸고 집권한 그는 금융과 우정부문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그 와중에 개혁저항세력(특히 지민당 내 하시모토파)을 타격함으로써 높은 인기를 유지해왔다. 고이즈미의 공적은 신자유주의(작은정부론)를 정책이념의 정점에 가져다 놓은 것이다. 그는 작년 총선 압승이후 정부계 금융기관 통폐합, 의료보험개혁, 공

3) 오자와 등의 보통국가론은 국제적으로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국내개혁을 주장하나 이는 정치개혁일 뿐 경제개혁의 관심은 사상되어 있다.

무원개혁, 지방자치개혁,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신의 후임으로 “개혁성”을 중시하겠다고 공언할 만큼 그의 정치어젠다에서 중심은 개혁이다.

고이즈미정권에 대한 국민/유권자의 지지는 그의 결연한 개혁의지로부터 나온다. 물론 그는 개혁의 이미지만 좇을 뿐 실제적인 개혁에는 의외로 어둡고 관심도 낮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본유권자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고이즈미의 이미지는 개혁의 전도사이다(강한 지지, 약한 반대). 반면 보통국가적/신보수주의적 이슈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그다지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대 역시 약하기 때문에 보통국가적 정책은 흐름을 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약한 지지, 약한 반대). 야당은 여당의 신보수주의에 대해 원칙있는(principled) 반대 보다는 기회주의적으로 반자민당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의 전도사로서 이미지와 함께 고이즈미는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우익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는 우익적 이슈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며 때로는 무관심한 면을 드러낸다. 그는 개헌에 대해 일정하게 개입(방해성 개입)을 한 바 있고, 여성천황을 용인하는 황실전범 개정을 추진하려던 전력도 있으며, 북일교섭에의 적극성, 미군재배치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의외의 소극성(“총리의 관심결여와 지도력 불행사” 비난)을 보인 바 있다. 그렇다면 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개인적 소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사실 그는 집권이전에는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며 2001년 유세기간 중 언급하여 이후 이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분열에 대응하는 복고적 통합기제, 다시 말해서 개혁에 대한 전통적 보수층의 공격을 저지하는 기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어쨌든 이는 중국(차후 한국)의 외압에 대한 저항 즉, 주변국의 “반일 내셔널리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과시적 행위이지 아시아무시의 우익사관을 반영하는 체계적 외교행위라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요컨대, 현재 정치지형은 보통국가화의 움직임이 중심이고 경제차원에서 신자유주의가 지탱하고 있으며 보수분류와 우익은 주변이라 할 수 있겠다.

4. 한일관계에 주는 함의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잘못된 역사를 미화...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민의 자존을 저해하는 일본정부의 행위”(2006월 4월 대통령의 독도문제에 관한 특별담화문)

“아직도 일본이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다시 패권의 길로 나아갈지 모른다.”(2006년 3.1절 경축사)

“[독도영유권 주장은] 제2의 한반도 침탈행위...대한민국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2005년 3월 NSC 상임위 성명)

한국은 일본이 “우경화”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일본은 한국이 “좌경화”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한국이 말하는 우경화란 일반적인 좌-우 구도 속에서의 우경화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따진다면 일본은 1945-47년을 제외하고 나면 항상 右이었던 바, 일본의 현재를 우경화라 하면 이는 현실을 이해하는데 그다지 유용한 개념은 아니다. 다른 한편 우경화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에서는 다른 의미작용을 일으킨다. 1980년대 역사에 고정된(lock-in)된 언어 즉, 역사왜곡으로서의 우경화란 의미이다. 한국은 이 우경화개념을 사용하고 있는가?

한국은 보통국가화로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미일동맹의 일체화, 역사왜곡, 야스쿠니참배 모두를 싸잡아 우경화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나아가 최근 한국정부는 독도문제를 영토문제가 아닌 역사문제로 간주하여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독도의 역사성을 일본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역사왜곡(제국주의의 역사미화, 한국의 역사모독)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독도주장은 우경화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대상으로서 일본을 ‘하나의 일본(monolithic Japan)’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이 복잡하듯이 일본도, 그리고 일본의 보수도 복잡하다. ‘우경화하는 일본’이란 언어는 많은 것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물론 ‘복잡함’이 일본을 용서해 주는 언어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단순함’은 힘의 상대적 열위에 처해 있는 한국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우경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으나 이렇게 믿고 정책을 펴는 것은 외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행 대일정책의 재점검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일본의 현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독도를 지지하는 세력/국민, 보통국가를 지지하는 세력/국민, 역사미화를 지지하는 세력/국민은 서로 다르다. 물론 이들간 중첩(교집합)은 분명 존재한다. 또 집합의 크기로 따지면 독도>보통국가>우경화가 될 수 있다. 이 세 그룹을 하나로 묶어 우경화세력으로 간주한다면 일본국민 대다수를 우경화의 대상으로, 따라서 교정의 대상으로 삼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일본의 현실은 다르다.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인하는 행위가 우

경화의 표출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일본 내에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비록 한국정부는 대다수의 국민과 일부정치지도자를 나누어 접근한다고는 하지만 말 뿐이고, 일본의 대다수는 영토주장을 우경화로 비판하는 견해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보수분류, 우익, 그리고 혁신/진보세력은 상대적 소수이다. 일본내 양심세력(=혁신/진보)과 연대하여 일본의 부당함을 확산시키겠다는 공공외교론(public diplomacy)은 보수화된 일본의 상황 하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또 현재 보수진영 내에서 보수분류로의 역코스 역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대중화한 우익을 효과적으로 봉쇄(contain)하는 -- 보통국가론자들이 우익으로 경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 방안과 함께 주류인 보통국가론을 분리, 정조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이들의 마음의 습관(habit of mind)을 읽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몇가지 정책적 함의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의 완성으로서 보통국가를 추구하는 일본에게 탈근대적 사고와 공헌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권의 이양과 공유로서 지역주의라는 탈근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일본의 리더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보통국가의 대내적 태세로서 정체성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역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셋째, 또 다른 대내적 태세로서 개헌의 길은 비교적 가까이 와 있다. 넷째, 독도나 개헌을 우경화로 압박할 때 보통국가론자들은 한국과 거리두기(distancing)정책을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세안, 인도, 호주 등을 향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다섯째, 보통국가의 대외적 태세로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세력균형적 사고가 지배적이고 이런 속에서 한일관계를 중일관계의 이차질서로 인식하는 측면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일본이 보통국가의 세력균형으로 판을 읽고 움직인다면 한국은 시끄럽고 각박한 외교전쟁이 아니라 조용히, 차갑게 세력을 키우는 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내용 문의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704 우)100-813 / 전화 (02)779-0711 / 팩스 (02)779-0718 / 메일 kifs@kifs.org